

이천, 올 첫 노지 모내기

10일 오전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논에서 올 해 첫 노지(露地·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 모내기가 실시됐다. 'EM친환경농업 이천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모내기는 인근 하이닉스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를 이용해 다른 지역보다 두 달 가량 빨리 실시됐다.

〈자료: 동아일보 3.11〉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발전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최우수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를 선정하고 지난 11일 농어촌공사에서 표창했다고 밝혔다.

농업 관련 기관들이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시상식을 마련한 한농연은 그동안 농어촌 자녀 특별채용, 농지연금제도 시행, 노사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한 농어촌공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김준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매진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표창으로 임직원들에게 동기 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농민과 더욱 소통이 잘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문표 사장은 “큰 상을 주신 만큼 더 분발해서 농업·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자료: 농어민신문 3.14〉

“새만금 수출농업단지 조성”

새만금지역의 농업용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농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개발 계획에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2만8,300ha 중 농업용지 8,570ha를 비롯한 농촌도시용지·바이오작물 생산용지·생태환경용지 등 1만1,259ha의 용지조성 계획과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및 방수제 건설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농업용지는 3대 개발기능에 따라 11개 용지로 구분·배치해 2020년까지 개발된다. 우선 3,355ha 규모의 첨단수출농업 전진기지는 연구·생산·가공·유통체계를 갖춘 곳으로 첨단시설원예단지 및 대규모농어업회사법인, 농산업클러스터가 배치된다.

또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첨단 농산업 기능을 하는 부지(4,469ha)에는 식량기지 역할 등을 하는 복합곡물단지와 자연순환형유기농업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가 조성되고 녹색성장과 농업생태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746ha)에는 저탄소녹색성장시범단지, 농업테마파크, 농촌마을, 묘목장, 수목원 등이 구축된다.

〈자료: 농어민신문 3.21〉

우리나라 페루와 8번째 FTA 정식서명

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식이 21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뤄진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서명하는 8번째 FTA로, 남미지역과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페루 FTA는 '09년 3월 16일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10년 8월30일 협상이 타결됐으며, '10년 11월 15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방한 시 양측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가서명했다.

농림수산물부는 페루와의 FTA 협상결과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해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집중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중 쌀은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는 것. 다만 포도와 오렌지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한다.

<자료: 농정신문 3.21>

한국농어촌공사, 수질개선 특별대책 발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011년을 '수질개선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저수지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농어촌용수 수질을 적극 관리,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저수지 3천363개소에 대한 수질전수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해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녹조발생 저수지에 대해서는 녹조가 심각한 저수지부터 '녹조 제거선'을 투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4개년 평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저수지 30개소에는 단기간에 수질개선효과가 큰 미생물처리, 물순환 촉진 등의 공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주민 스스로 수질감시에 참여해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 지역문제의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수질 자율관리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단체, 학교 등과 MOU를 체결하고 수질조사에 필요한 기술과 물품,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한국농정신문 3.22>

“새만금 축산오염 15% 추가 제거”

정부가 새만금 상류 주요 축산 오염원인 전북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의 환경을 익산시 왕궁농원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휴·폐업 축사를 매입해 수립대를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수거, 하천 유입을 막으면서 만경강 지류인 용암·마산천의 생태를 되살리는 방식이다.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전북도는 24일 이를 골자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곳 3개 농원 휴·폐업 축사 196동 등(10만3454㎡)을 매입해 그 부지에 바이오순환림을 만들기로 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규모를 하루 200㎡에서 300㎡로 늘리면서 하루 180㎡를 처리할 마을 하수도도 시설하기로 했다.

또 만경강 지류인 용암천(5.1km)와 마산천(8.6km)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가축분뇨로 덮인 소류지 8곳을 생태습지로 만드는 한편, 신암·비룡 두 농원에 1곳씩 한센인 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조선닷컴 3.24>

정부, 방역체계 개선·축산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방역시스템 개선과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다.

우선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단계에서, 질병 발생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즉, 네덜란드에서 실시

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진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가칭)'가 설립된다.

국경검역도 강화돼,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자료: 농정신문 3.28>

“사회적경제, 국민 공감대 얻어야”

사회적 기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전문인력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재단이 창립 7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aT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사회적 경제 의미와 역할=사회적 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 즉,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이다. 사회적 경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고 운영·경영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자활사업(보건복지부) 등도 사회적 기업 관련 유사정책이다.

이런 사회적 경제는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지역활성화의 대안이 되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 사회적 경제의 증가추세에 대한 파악, 사회적 경제의 향후 발전전망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자료: 농어민신문 3.28>

대규모 축산농 '허가제' 내년 도입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유정복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설명한 방역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가축 질병에 대해 초동 대응체계·국경검역 강화·축산 농가 방역의식 제고 등 방역체계 개편과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예방접종 계획 및 축산업허가제 도입,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축 질병발생 초기 단계부터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해당 농장의 분뇨와 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제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 예비조직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한다.

<자료: 농민신문 3.28>

농촌진흥청-빌게이츠재단, 에티오피아 빈곤퇴치 위해 협력키로

농촌진흥청이 빌게이츠재단과 함께 아프리카 53개국 중 최빈국인 에티오피아의 식량안보와 빈곤퇴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빌게이츠재단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인식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구체적인 협의는 지난 29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농촌진흥청 민승규 청장과 빌게이츠재단의 에티오피아 주재 수석프로그램담당관인 칼리드 봄바(Khalid BOMBA) 등이 만나 진행되었다.

양측은 대한국민 주도로 다음날 30일에 열리는 '한-아프리카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제1차 총회 참석차 이곳을 방문했다.

〈자료: 동아일보 3.29〉

日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수입중단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지역의 식품 수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열고 이같이 결정한 데 이어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사고에 대비한 기관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섭취 제한이나 출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오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자료: 농민신문 3.30〉

“유럽NGO, 대북식량 추가지원에 부정적”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럽의 NGO(비정부기구)들이 긴급식량지원을 호소하는 유엔 산하기구들과 달리 북한의 식량요청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1997년부터 북한에서 농업지원 활동을 펼치는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북한 사업담당관은 “저먼 애그로 액션이 주로 활동하는 평안도와 함남 함흥 외곽지역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한 식량난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유엔 보고서 내용에 의혹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식량을 요청한 데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마허 담당관은 “북한은 겨울 작물보다 (수확시기가 6~8월인) 감자와 옥수수가 주요식량이어서 식량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지원 요청은 (북한이 조사를 요청한 겨울보다) 이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수백만 유로를 들여 값비싼 식량을 지원하는 것보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법이나 농업개혁 등 자립을 돕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조선일보 3.30〉